

## 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시아 공통통화\*

*Eisuke Sakakibara*

오늘 본인은 아시아 경제통합과 통화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경제통합은 시장과 민간기업 주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럽 통합과 대조적이다. 유럽통합은 조직 및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통통화를 출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제도구축의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한참 뒤쳐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아 경제통합은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무역 통계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량이 전체교역량의 55%를 차지한다. 1990년에는 이 수치가 40%였다. 즉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국가(여기서 동아시아 국가란 ASEAN+3 국가를 말한다) 간 역내무역이 15%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무역은 앞으로 4~5년 내에 6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역내무역은 현재 65%로, 지난 15~20동안 지금의 수준에서 매우 안정된 상태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무역도 아마 앞으로 10여년 내에 유럽연합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 및 투자가 사실상 통합됨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통합과 유럽 통합을 비교할 때 동아시아가 유럽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아시아의 통합은 이미 NAFTA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지금은 유럽연합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발전 단계, 종교, 인종, 가치관 등 아시아 내의 다양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통합은 유럽 통합과 다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단계 면에서 보면, 유럽이 수평적 통합인데 비해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통합이다. 물론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참여로 유럽연합도 어느 정도 수직적 통합 단

---

\* 이 글은 2006년 9월 12일 개최된 'IGE/Prudential 국제금융특강'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을 밝혀둡니다.

계에 들어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 간의 수평적 통합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아시아 통합의 경우 중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인해 수직적 통합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 5~10년 전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한-일 양국의 산업공동화와 실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대해 염려하면서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른바 “윈-윈(win-win)”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중국과 통합됨으로써 큰 혜택을 얻고 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는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생산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된 상태이다. 공급연결네트워크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생산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태국의 방콕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은 이 부품들을 조립하여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본인 친구들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언급할 때 본인이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즉, 엄청난 대미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수출품의 30~40%는 일본 제품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국산 첨단 제품의 일부 부품들은 일본 제품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무역흑자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의 진실은 위와 같은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역내 부품무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전체 부품무역의 특징 중 한 가지도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공장이 구축된 상태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모든 국가에 걸쳐있는 다지역적(multi-regional) 기업들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며, 이와 같은 생산네트워크는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본인을 일본에 있는 인도경제연구소(Indian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 소장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인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도-중국 간 무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인도는 중국 상품의 최대수입국이다. 또한 인도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따라서 인도와 같은 나라가 제조업에 진출함으로써,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도 아시아의 분업체계 또는 생산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ASEAN+3 간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통합은 인도와 동남아

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제도적 기틀도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 본인은 이러한 주제, 특히 통화 및 금융 부문의 통합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의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매우 두드러진 양상을 든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이다. 물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이전에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 같은 나라들과 일부 ASEAN 국가의 중산층이다. 아시아 중산층의 생활패턴이나 가치관은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중산층 사이에서 아시아인의 감성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일본, 태국, 중국의 중산층들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생활패턴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패스트푸드(fast food)를 먹고 명품과 고급아파트를 구입한다. 이러한 중산층 생활패턴의 유사성이 이른바 새로운 아시아인이라는 자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아시아인에 대한 자각성 또는 동아시아 국가의 보편적 가치는 한국이나 일본, 또는 여타지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정치인들은 대중적 인기를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추세이나, 동시에 신흥 중산층의 보편적 가치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영화나 TV를 보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일색이다. 여러분들이 일본 TV를 켜면 거의 매시간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를 “한류”라고 한다.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동아시아 내의 일본 애니메이션(animation)과 대중음악도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중산층이 동일한 가치관과 기호(嗜好)를 공유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매우 건전한 발전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정치적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신흥 중산층의 보편적 가치관을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거대한 단일시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신흥중산층의 규모는 일본 인구의 두 배인 2억 내지 2억 5천만 명이라고 한다. 여기에 ASEAN의 신흥중산층과 한국, 일본, 대만의 중산층을 합치면 동아시아 중산층 집단의 규모는 엄청나다. 게다가 인도의 신흥중산층 규모도 1억 5천 내지 2억 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시아 전체 중산층 규모는 미국과 유럽 중산층을 합한 것 보다 더 많다. 말하자면

제조 및 생산뿐만 아니라 최종재화와 소비시장 면에서도 아시아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이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여타지역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10~20년 내에 아시아 지역은 생산 및 소비 양쪽 모두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가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5~10년 내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본인이 일본 대장성에 있으면서 미국과 협상할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요구는 소비 또 소비였다. 당시 본인의 협상 상대였던 래리 서머즈(Larry Summers)는 미국이 영원토록 최종소비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곤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는 바뀌었다. 아시아 역내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유일한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사실 미국은 과도한 소비로 인해 많은 규모의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동아시아가 훨씬 큰 소비시장이며 미국에 비해 훨씬 큰 최종수요 종착지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시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역사를 자주 참고한다.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시장의 부상은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재(再)부상하는 것이다. 본인은 가끔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Angus Madison 교수가 집계한 수치들은 인용하곤 한다. Madison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영국이 19세기 초에 이미 아시아 대부분을 식민지화하였지만, 1820년대까지도 세계 전체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고 인도의 비중은 16%였다. 1820년대의 세계 GDP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였던 것이다. 그 당시 신흥 제국주의국가였던 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다. 1820년경에 인도의 대부분은 이미 영국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은 물론 중국이다. 현재의 상황은 잠자고 있던 두 거인의 재부상이다. 아시아는 7~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경제의 중심지였다. 서방국가들이 아시아 각국 경제를 지배하고 식민지화한 것은 지난 150년 동안에 불과하다. 지금 이러한 것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지난 5~10년 동안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중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시아의 통합은 개방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통합은 폐쇄적 지역주의가 아니다. 동

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에는 미국과 유럽 양쪽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이 아마 유럽 통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역사적 유산이다. 19세기까지 아시아(특히 중국과 인도)는 세계무역체계의 중심이었다. 15~16세기로 거슬러 가서 콜럼부스(Columbus)의 항해 목표가 어디였던가를 보라. 그는 인도로 가고자 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드 가마(Vasco de Gama)가 가고자 했던 곳도 인도다. 그 당시 인도는 세계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유럽인들이 인도로 가고자 했다. 당시의 세계무역으로부터 얻는 혜택은 아랍, 이탈리아, 인도, 중국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스페인 및 포르투갈 상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나누어 갖고자 했다. 15세기 말~16세기 초에 그들이 인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는 개방적인 무역지역이었으며 또다시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다. 그런데 왜 지역통합이 논의되고 국지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인가? 겉으로는 이러한 것이 역설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IT, 금융, 정보 부문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보나 기술, 자금을 이전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졌다. 금융 및 정보 부문은 사실상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비용이 드는 것은 물건과 사람의 이동이다. 동경에서 서울오기는 매우 쉽다. 소요시간도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마치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 같다. 동경에서 뉴욕 가는 것은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며 몹시 피곤하다. 14시간이 걸리고 시차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서 기술, 정보, 자금의 이전은 세계화되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드는 것은 거리이다. 이처럼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거리가 실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주변 국가들과 교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경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역통합 논의는 지난 5~10년 동안의 세계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다. 금융 및 정보, 기술 부문의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 및 1:1의 직접적인 서비스 산업에서 지역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리상으로 근접해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과 직접투자가 통합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기구 및 제도 구축 움직임이 늦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Donald Tsang 현 홍콩 최고행정관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홍콩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두

가지의 불일치에 대해 계속 거론 해왔는데 통화 불일치와 만기 불일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막대한 규모의 아시아 저축액이 달러표시 예금을 통해 미국 달러화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단기 차입금은 지역통화로 장기 전환되었다. 이 때문에 통화 불일치와 만기 불일치가 존재했던 것인데, 이러한 자금의 갑작스런 인출이 도화선이 되어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 이후 한국,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관계당국들은 통화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통화 불일치를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로써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치앙마이 협정은 관계국들의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양자간 통화스왑(swap) 협정이다.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 ASEAN 회원국들이 이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섭중인데 머지않아 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다음 단계가 별도 목적의 자금조성을 위한 외환보유고 배정이다. 본인은 아시아 각국 외환보유고의 5%를 따로 적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일본보다 많다. 중국과 한국,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합산하면 2조 달러가 넘는다. 우리는 이 외환보유고를 잘 활용해야 하며, 아시아 주식시장을 육성하거나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위기시를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향후 5~10년 동안 이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아시아가 공동으로 외환개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 구축이다.

정치적인 난관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의 5%를 별도의 목적으로 적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통화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는 당사국들에게 실현 가능한 제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보유고의 100%를 배정한다면 통화정책을 완전히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5~10년 내에 통화정책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30~40년은 걸려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외환보유고의 5% 정도는 당사국들의 전문가들이나 아시아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 부문의 협력과 더불어 아시아 채권시장에도 중대한 발전이 있었다. 이른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가 그것이

다. ASEAN+3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ASEAN과 중국, 한국, 일본이 지역채권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채권시장이란 지역화폐로 표시되는 채권시장이다.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쇼군 본드(Shogun Bond)"와 같은 엔화표시 채권시장은 일부 있었지만 엔화가 아닌, 지역통화표시 채권의 국제통용은 그다지 없는 상태이다. 2005년 5월에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시아채권시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4개의 실무반이 공식 구성되었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지원과 각국 수출입은행의 측면지원도 이루어져 지금은 태국 바트화, 중국 위안화, 필리핀 페소화 등 지역통화표시 채권의 국제통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지역통화표시 채권 유통에는 준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1999년에는 지역채권시장 비중이 GDP의 16.5%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지역채권시장(엔화를 제외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통화로 표시된 국제채권시장을 말한다)이 48%로 확대되었다. GDP의 약 150%에 이르는 미국 같은 대규모 채권시장에 비하면 48%는 아직도 아주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8년 사이에 채권시장이 3배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매우 괄목할만한 발전이다. 이러한 채권시장이 향후 5년 내에 100% 확대된다면 이는 중대한 진전일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저축의 중요한 원천이다. 왜 동아시아의 저축자금이 전부 뉴욕이나 런던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며 뉴욕 및 런던의 금융가, 또는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은행들이 이 자금을 중개하도록 방치해야 하는가? 지역채권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관련국들의 기본발상이다. 현재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국 재무당국 관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어 아시아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동아시아 내 지역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또 다른 발전은 아시아 공통통화(Asian Currency Unit, ACU)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다. 이 연구는 ADB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쿠로다(Haruhiko Kuroda) ADB 총재는 ACU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인 후임으로 일본 대장성 국제담당 차관을 역임한 그는 본인의 절친한 벗이기도 하다. 그러나 ACU에 대한 구상은 ADB에서 ASEAN+3 재무장관 회의로 이관된 상태다. ADB는 이 문제를 다루기 힘든 국제기구이다. ADB는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

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지역 구상들을 추진하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최종적인 장소로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ACU에 대한 연구가 ASEAN+3 재무장관 회의로 이관된 것은 이 때문이다.

ACU 창설은 장기적 과제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30~4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아시아 경제가 무역 및 직접투자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 구축은 현재 미비한 상황이다. 유럽 방식의 공통통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아시아 각국 간의 제도적 차이가 문제이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스템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국이 자본계정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건설하고 건전한 국내 금융시스템을 이루려면 아마 10년 정도 더 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통통화가 창설되려면 30년 정도의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 생전에 ACU 창설을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ACU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으로써 그 첫 단계가 시작된 상태이다. 조금 전 본인은 역내 아시아채권시장의 창설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화 단일화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 단계는 ACU표시의 지역채권 발행이다. 유럽 통화단일화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조치가 단일통화표시 채권발행이었다. 즉 가치계산에 필요한 통화바스켓을 가진 모종의 ACU 통화단위를 설정하고, 이 ACU로 표시된 중국, 한국, 태국의 국채나 ADB 채권을 발행한 다음 이를 각국 통화로 바꾸는 것이다. 잠정적일지라도 통화단위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이는 향후 2~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ACU에 대한 각국 통화의 가중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를 가지고 ACU표시 채권의 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현재 아시아 각국 재무당국 및 관련기관(중앙은행)은 이를 ACU 활용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무역 및 직접투자 부문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하여 새로운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 단일화는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역내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통화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한국경제는 지금 매우 견실하다. 하지만 한국 원화가 엔화에 비해 상당히 절상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안정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다. 중국 위안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안정도 중요하고 일본 엔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환율도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달러 위주의 환율만 얘기한다. 왜냐하면 환율시장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엔화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원-달러, 엔-달러 시장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 외국환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유로(Euro)시장은 많이 발전한 상태다. 동경에서는 엔-달러 시장과 함께 엔-유로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다. 언젠가는 중국이 자국의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홍콩이 중국 위안화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역통화시장의 발전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일 간의 거래계정을 청산하기 위해 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ACU나 지역통화를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물론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이며 또한 앞으로 수십 년간 기축통화로 존속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달러화의 역할이 일부 유로화로 이전되면서 유로화가 제2의 기축통화로 떠오르고 있지만 진행속도는 느리다. 특히 ACU에 대한 논의 과정이 매우 더디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내무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CU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역내무역의 비중이 유럽연합 수준인 65%에 이르게 되면, 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거래계정을 지역통화로 청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지역통화시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통화시장의 큰 변동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도 일본과 한국의 정책당국이 외환보유고의 50%를 유로화로 확보하고자 결정한다면 외환시장은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금의 추세이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21세기는 아시아 경제의 시대이다. 아시아통화시장의 발전과, 거래 및 대금결제에 있어서의 ACU 사용은 장기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를 성숙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아시아채권시장이 창설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무역, 투자 등의 부문들과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시아는 개방적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 개방적 지역주의가 화두인 것이다.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유럽과의 관계도 긴밀히 유지해야 하며,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의 역내 참여는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역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 기업들조차도 기업활동을 국지화하고 있다. 이들이 다국적 기업이지만, 동아시아

아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하는 한 동아시아 기업이다. 이처럼 세계화와 국지화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0년 동안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극히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한 중산층과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본인은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 양국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줄곧 언급해왔다. 양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 조장은 일부 쟁점사항의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화두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 신흥 중산층의 이러한 보편적 가치이며, 이것이 바로 관건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역내 유대관계를 문화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 일본 정부에 비해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것에 맞출 것으로 본인은 크게 기대한다.

## 질의·응답

**[문]** 동북아시아만의 통합 가능성이나 APEC 회원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 경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답]** 솔직히 말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한다면 변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현재 아시아에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이므로 현 상황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상유지일 뿐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이한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이한 환율제도의 채택은 항상 세계 시장의 심각한 혼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력이 이동했던 세계 대공황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런 만큼 상이한 환율제도의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결국 ACU의 창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일본이 대립관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연합 출범 초기에 독일과 프랑스도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대립관계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독일과 프랑스도 제휴를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CU의 창설은 장기적 과제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3년이 아니라 약 20년 후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의 문화는 중국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며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합의는 ASEAN+3 국가에 국한하는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은 다른 나라도 포함하는가? 이 문제는 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상품과 사람의 이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주대륙이나 호주와 같은 다른 대륙과 경제통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 타당성이 그리 크지 않다. 주변 국가들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주변국가의 범주에 ASEAN+3에서 ASEAN+4 또는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인도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무역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가의 범주를 인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그 대신, 아시아 지역통합은 개방적인 통합이어야 하며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를 결코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이 어려운 문제이다.

**[질문]** 일본이 한-중-일 간의 FTA 제안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한-중-일 어느 나라가 제안하던 간에 동북아시아 FTA가 추진될 필요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일본 및 한국 양국 모두에게는 농업부문이 FTA체결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본인은, 일본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사과 등 과일류는 품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수출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심지어 쌀까지도 미국이나 여타 지역에 수출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해온 본인의 주장이다.

생선초밥(sushi)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인 관계로 본인은 뉴욕에 가면 생선초밥 식당에 가끔 간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쌀이어서 본인은

식당 주인에게 일본산이나 한국산 쌀을 사용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산 쌀은 생선초밥에 적합하지 않다. 일본산이나 한국산 쌀이 생선초밥에 적합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일본산이나 한국산 쌀도 수출 가능하다. 일부 일본산 쌀은 품질이 아주 뛰어나지만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식사비용이 100불인 생선초밥 식당에서 품질 좋은 쌀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의 농업정책이 고품질 또는 특화된 작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양국 농산물 시장은 세계 여타지역에 대폭 개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두면 농산물 시장은 개방 가능하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그리되면 동아시아 국가 간 FTA도 체결될 수 있을 것이고 FTA가 체결되면 이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역내무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질문]** 일본은 G-3 바스켓 통화를 바탕으로 한 통화협력을 지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일본의 정책입안자 대다수가 ACU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며, 장기비전에 대한 선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달러, 유로, 엔화의 G-3 통화 바스켓과 ACU 현재의 통화 바스켓은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한 통화 바스켓을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비중을 둔 잠재적 바스켓이다. 이러한 것이 예컨대 외환보유고와 민간기업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관리하기 위한 원래의 바스켓 개념이다. 하지만 ACU의 통화 바스켓은 아시아 공통통화의 창설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스켓에 유로화나 달러화를 포함시킨다면 이것이 ACU 창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스켓은 개념상 서로 다르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바스켓을 약간 혼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환보유고를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달러, 유로 등으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의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국가들도 시행 중이다. 중국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이와 같은 통화 바스켓을 채택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분명히 그러하다. 외환보유고의 계산 및 관리 수단으로써 이와 같은 바스켓제도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ACU 통화 바스켓은 30~40년 후의 아시아 공통통화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유럽처럼 선도 국가들이 이를테면 ACU 창설을 목표로 삼겠노라는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중-일 정치인들이 점점 화해를 이루게 되면 결국 그러한 선언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경제통합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공통의 목표는 경제통합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통합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 물론 경쟁도 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 간에 일종의 보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대통령, 중국 총리, 일본 총리가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갖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중-일 3국의 일부 재무관료 및 전문가들이 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따라서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4~5년 내에 관련 당사국들 간의 공통된 정치적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경제를 보면 세계적 무역 불균형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적자에 대한 재원조달을 아시아의 저축이 하고 있다. 귀하는 아시아의 소비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아시아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세계경제의 양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답변]** 이는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이 과소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중국도 물론 과잉투자 상태이다. 미국의 과소비는 오래된 문제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약간 비공식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인 셈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은 자국의 과소비를 뒷받침할 달러화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시기가 내년 또는 내후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아직 그러한 상태는 아니며 미국경제는 현재 견실하다. 그렇지만 미국경제가 취약해짐에 따라(지금 여기저기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유로화가 제2의 기축통화로 부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좀 더 많은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만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종의 협상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G-7이 이와 같은 일을

논의하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무역불균형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인 관계로, 본인으로서도 향후 2~3년 내에 앞서와 같은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아시아 역내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내수요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른 환율체제로의 원만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시키는 일종의 확대 G-7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G-5는 일본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 경제상황에서 원만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일본을 참여시킴으로써 탄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금융 협상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질문]** 중국의 중간재 및 부품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걱정스럽다. 이러한 산업발전이 완성되면 한국은 수출할 상품이 없을 것이다.

**[답변]** 귀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결국 Haier 같은 중국 기업들은 삼성이나 LG, Sony, Matsushita를 따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수준과 혁신 등에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 중국인들은 능력 있고 혁신적이기 때문에 힘든 경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내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지화도 필요하다. 중국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술 및 혁신 면에서 조금 앞서 나간다면 중국과의 보완적인 관계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질문]** 귀하는 ASEAN+3의 틀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통합 과정의 표상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귀하는 동아시아 통합과정의 폐쇄적인 시스템보다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언급도 하였다. 본인은 일본이 ASEAN+3의 틀 위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ASEAN+3의 틀과 ASEAN+6의 틀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답변]** 일본 정부에는 여러 부처가 있고 각 부처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견해는 ASEAN+3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SEAN+3 중심의 통합작업은 이미 착수된 상태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반들이 실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ASEAN+3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SEAN+3는 가령 인도와 같은 나라들을 참여시킴으로

써 확대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ASEAN, 중국,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통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대관계가 발전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나아가 아랍국가, 중국에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경제발전과 기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구 및 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 ASEAN+3에 당분간 전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도나 호주, 뉴질랜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보다는 인도가 더 유력한 후보라는 것이 본인의 시각이다.

**[질문]** 귀하는 보유 외국자본이 풍부함에도 아시아 국가들이 왜 뉴욕이나 런던의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금융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시아채권시장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는 아시아 역내의 통화 가치 안정이며, 그 다음은 아시아 각국의 자본시장이 세계 수준으로 발전해서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정책 상의 환율정책 조정을 위한 일정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아시다시피 ACU가 등장하기까지는 약 30~40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 간 중·단기 환율정책 조정을 위해 귀하가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답변]** 우선 미국 금융기관이 아시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이라는 귀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시아의 저축액이 뉴욕으로 흘러들어 가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뉴욕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탄력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의 의견에 동감한다. 하지만 어제 본인이 Mizuho Corporate Bank의 은행장과 나누는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 보겠다. Mizuho Corporate Bank는 최근에 한국의 주요 기업 두 군데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그 은행장의 말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법 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뒤쳐져 있다. 그러나 동경과 서울의 금융시장을 보면,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훈련을 받거나 Harvard, Pennsylvania 대학교 등지에서 MBA를 취득한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 은행으로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 은행장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역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업무수준을 갖춘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

다. 한국과 일본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금융기법을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본인은 절대로 반미주의자나 반유럽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들을 따라 잡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장기침체와 금융문제에서 벗어난 일본의 금융권은 드디어 이와 같은 국제화 노력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가 아시아 각국 금융시장의 민간기업을 통해 금융기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환부문 협력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안해 온 것은 외환보유고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리체계는 시작 단계에서 협상 가능하며 이 기금을 공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를 적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나 재무당국 관료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외환협력으로 가는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질문]** 앞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다. 귀하는 일본 정부가 ASEAN+3를 비롯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협력을 주도하는 책임은 최소한 당분간은 ASEAN+3가 떠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정상회의 문제는 중국-일본 간의 큰 쟁점이었다. 중국은 ASEAN+3를 고집하는 한편 일본은 ASEAN+3를 확대하여 3개국을 더 포함시키고자 했다. 본인은 일본인이지만 당분간 ASEAN+3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견해를 지지해왔다. Mammohan Singh 인도 총리나 John Howard 호주 총리를 ASEAN+3 회의에 초청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ASEAN+3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 여러 나라 총리들을 초청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4~5년 동안은 ASEAN+3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EAN+3 국가 중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질문]**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신장되었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은 사실상 없다. 흑자는 기축통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통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를 뒷받침하는 주권력에 대한 신용과 신뢰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때문이다.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통화나 채권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주권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답변]** 본인이 귀하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달러화는 현재 기축통화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유로화도 4~5년 내에 기축통화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향후 40~50년을 전망해보면 제반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Goldman Sachs사는 BRICs 보고서를 통해 2050년의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본인은 4~5년 후가 아니라 43년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하게 되면 모종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인이 군사력 측면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안다. 중국과 인도가 결합한다면, 중국, 인도, 동아시아가 결합하면 세계 지배세력이 될 것이다. 본인은 1999년까지 일본 정부에서 일하면서 2~3년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계에 있는 관계로 40~50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이 40~50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세계경제 내에 반드시 어떤 전환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문]** 통합으로 인해 각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통화 및 금융 정책수단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통합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답변]** 귀하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통화 단일화라는 말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이라는 뜻이다. 통화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며, 본인이 통화 단일화를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통화 단일화는 향후 30~40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 형태와는 다른 통화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일의 전개방식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지난 1,500년간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상업국가였다. 모든 일이 시장과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10~20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이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일들이 국가와 제도,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는 시장과 기업, 민간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향후 4~5년, 나아가 20~30년 동안 민간부문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겠는가? 아마 앞으로 20년 후에는 대다수 일본 기업들의 본사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소재하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본인은 아시아가 유럽형의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 아시아의 통합은 유럽의 형태와 아주 다른, 아시아만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